

勞 動 經 濟 論 集
第20卷(2), 1997. 12. pp.33~71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日帝下 在日朝鮮人 勞動運動의 特性에 관한 研究*

全 基 浩**

< 目 次 >

I. 머리말	IV. 民族解放 및 階級解放運動의 統
II. 在日朝鮮人 勞動運動 發生의 主體的·客觀的 條件	一體로서의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III. 在日朝鮮人 勞動運動의 基礎로 서의 親睦扶助組織과 共濟的 勞動 團體의 組織	V. 民族運動의 階級運動에의 解消 와 朝鮮人 生活擁護運動의 展開
	VI. 在日朝鮮人 勞動運動의 特性
	VII. 맺음말

I. 머리말

日帝의 朝鮮植民地에 대한 수탈과 착취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많은 조선농민은 생계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 국내외로 유랑하게 되는데 그 많은 부분이 渡日하여 在日朝鮮人 勞動者階級을 형성한다.

조선인의 일본도항은 1920년대에 들어서서 급속히 증가해 간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조선내에서 일본식민지정책에 의한 수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할 수

* 이 연구는 1996년도 경희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 慶熙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있는 방도가 없었다는 壓出要因과 일본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보다 값싼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었다는 吸引要因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재일조선인 노동자 숫자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는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재일조선인 노동자가 처한 객관적 조건과 3·1독립운동후 사회주의 사상의 고양을 배경으로, 또 그들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민족적·계급적 의식의 고양이라는 주체적 자각에 추동되어 재일조선인은 일본 각지에서 思想文化 등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재일조선인의 대부분이 노동자였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在日朝鮮人 勞動運動은 그러나 일반 노동운동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게 된다. 그것은 식민지 조선인의 노동운동이며, 더욱이 조선내에서의 노동운동이 아니라 식민지 본국인 일본내에서의 노동운동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특성들이다.

본고는 상술한 배경에서 나오는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의 특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勞動運動을 비롯한 在日朝鮮人運動에 관한 通史的인 연구나 地域史的인 연구 및 事件史的인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¹⁾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在日朝鮮人 勞動運動의 특성을 밝히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Ⅱ. 在日朝鮮人 勞動運動 發生의 主體的·客觀的 條件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이 발생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은 주체적인 측면에서 노동자수의 증가와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노동조건의 열악성이었다.

1. 主體的 條件

가. 재일조선인수와 재일조선인 노동자수의 증가

<표 1>은 연도별 在日朝鮮人數 및 在日朝鮮人勞動者數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1) 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제1장 제2절, 「연구현황과 과제」를 참고.

<표 1> 재일조선인수 및 노동자수

(단위 : 명)

	조선인수	노동자수		조선인수	노동자수
1915년 12월말	4,075	2,274	1934년 12월말	537,695	258,914
1917년 12월말	14,502	11,397	1935년 12월말	625,678	288,111
1920년 6월말	31,720	28,229	1936년 12월말	690,503	402,453
1924년 5월1일	89,042	74,470	1937년 12월말	735,699	304,002
1925년 6월말	136,809	106,421	1938년 12월말	799,878	322,946
1929년 6월말	271,280	189,895	1940년 12월말	1,190,444	501,628
1931년 12월말	311,247	173,621	1941년 12월말	1,469,230	665,277
1932년 12월말	390,543	201,104	1942년 12월말	1,625,054	757,827
1933년 12월말	456,217	230,139			

자료 :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제1권~제5권, 三一書房, 1974~1976에서 필자 작성. 모 두 內務省 警保局 자료임.

의하면 19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재일조선인수가 급증하고 있다. 즉 재일조선인수는 1915년에는 4,000여 명에 불과했지만 1920년에는 3만 1,000여 명, 1925년에는 약 13만 7,000명으로 급증해 간다. 그리고 1931년에는 31만여 명, 1935년에는 62만여 명, 1940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여 119만 명, 그리고 1942년에는 162만 명이 된다.

이와 같이 재일조선인수가 급증하는 것은 우선 식민지 조선내에서의 압출요인에 기인한다.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의 2대 지주인 土地調査事業과 産米増殖計劃은 극소수의 지주에게 토지를 집중시키고, 중소영세농의 몰락, 대부분의 농민의 小作化를 초래하여 地主·小作農이라는 植民地地主制를 확대·강화시키는 가운데 소작농에 대한 지주의 착취가 강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地稅 기타 각종 공과금, 면직 등 가내부업 파괴, 공출강요 등 일제의 각종 수탈정책이 농민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²⁾

이 이외에도 이를테면 농촌경제의 상품화, 조선인지주 및 일인에 의한 고리대가 농민의 몰락을 한층 촉진시켰다.

이렇게 몰락한 농민은 일부는 잠재적인 프롤레타리아트로서 농촌에 소작농이나 머슴 등으로 잔존해 있고, 일부는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移村한 농민대중은 국내의 농업 이외의 부문에 종사하거나 해외로 떠나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일본으로 도항하게

2) 全基浩, 『일제하 재일한국인 노동자계급의 형성』, 『勞動經濟論集』, 제17권 제2호, 韓國勞動經濟學會, 1995, 5쪽.

된다.

조선인의 일본 도향은 이와 같은 압출(공급)요인뿐만 아니라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조선에서 구하는 일본자본의 요구, 즉 노동수요라는 흡인요인에 의해서 한층 더 촉진된다.

그러나 압출요인이 너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취업 여부를 생각지 않고 무작정 도일하여 일본에서의 조선인 실업자는 엄청난 수에 이르게 된다.

어쨌든 재일조선인수의 증가에 따라 재일조선인 노동자수도 급격하게 증가해 간다. 이를테면 1915년에는 2,000여 명에 불과했던 재일조선인 노동자가 1917년에는 1만 1,000여 명, 1920년에는 2만 8,000여 명, 그리고 1925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재일조선인 노동자수는 재일조선인수의 증가에 따라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1932년말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1936년말에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더욱이 일제는 연속적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군수산업에 노동력부족이 발생하여 1939년부터 많은 조선인을 강제연행해 가게 되고, 따라서 재일조선인 노동자는 1940년 50만여 명, 1941년 66만 5,000여 명, 1942년 75만 7,0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해 간다.

그러나 여기서 노동자라는 것은 취업하고 있는 피용자만을 의미하고 있다.

노동자를 이렇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는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업자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자리가 없는 자를 말한다.

해방 이전의 재일조선인 실업률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무직이라고 분류된 자의 비율에 의하여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 전체에 대한 무직자의 비율은 내무성 경보국 『社會運動の狀況』 각년판의 「内地在留朝鮮人職業別調」에 의하면 1925년 16.1%, 1926년 14.4%, 1929년 1.2%, 1930년 18.1%, 1931년 25.8%, 1932년 28.9%, 1933년 35.1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³⁾

그리고 무직자수는 1924년 1만여 명, 1925년과 1926년에는 각각 2만여 명, 1930년 약 5만 4천명, 1931년 8만여 명, 1932년 약 11만 3,000명, 1933년 16만여명, 1934년 19만 1,000여명, 1935년 22만 3,000여 명, 1936년 24만 8,000여 명, 1937년 27만 4,000여 명, 그리고 1938년 29만 4,0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⁴⁾.

단, 이 무직자수에는 부양가족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실업자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재일조선인에는 일반적으로 독신의 出稼勞動者가 많았다는 사실, 앞

3) 金廣烈, 「1920~30年代, 在日朝鮮人と失業救濟事業—名古屋市中心に」,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4號, 1994. 9, 39쪽.

4) 朴慶植 編, 앞의 자료집성, 제1권~제4권에서 필자 조사.

서 제시한 경보국 조사에는 小學兒童數가 따로 계산되어 있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비교적 소수였던 여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하면 무직으로 분류된 자의 대부분은 실업자로 보아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된다.⁵⁾

이와 같이 대부분이 실업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무직자를 고려에 넣는다면 실업자도 포함한 노동자수는 한층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수의 증가가 노동운동을 발생시킨 주체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에 의한 조직적 노동운동이 싹튼 것은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한 1920년대 전반기이며,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의 전국적 통일체인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이 창립된 것은 재일조선인 노동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1925년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증가는 비록 식민지라고는 하더라도 조선으로부터 일본이라는 다른 국가로의 노동자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내에서의 농민층의 분해에 의한 노동공급원의 창출, 일본에서의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渡航政策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와 같이 수적으로 상당한 정도에 이른 재일조선인 노동자를 기초로 하여 지식인 엘리트들이 1920년대에 들어서서 노동단체를 조직하게 되는 것이다.

나.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직종별 구성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직종별 구성은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어느 직종의 노동자들인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925년 6월말 현재 재일조선인 노동자 총수는 10만 6,421명인데, 그 직종별 구성을 보면 자유노동자가 5만 9,066명으로 56%, 직공이 2만 5,626명으로 24%, 광갱부가 1만 846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⁶⁾

1931년 12월말 현재 재일조선인 노동자 총수는 17만3,621명인데 이 중에서 자유노동자가 9만2,700명으로 53%, 직공이 5만1,457명으로 30%, 雇人이 1만8,225명으로 10%, 그리고 광갱부가 8,305명으로 5%를 차지하고 있다.⁷⁾

재일조선인 노동자는 그 절반 이상이 토목공, 인부 기타의 자유노동자이기 때문에 정

5) 金廣烈, 앞의 논문, 39쪽.

6) 內務省 警保局, 「在留朝鮮人の狀況」, 1925; 朴慶植 編, 앞의 자료, 제1권, 156쪽.

7) 위의 책, 제2권 1, 231쪽.

착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또한 방대한 수의 무직자에 포함되어 있는 실업자 중에도 자유노동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노동자는 정착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언제나 실업과 취업을 되풀이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자유노동자의 비율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제일조선인 노동운동의 주도세력은 자유노동자(실업자도 포함)이다. 제일조선노동총동맹이 자유노동자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1931년에는 1925년에 비하여 직공의 비율이 한층 더 높아졌는데, 이것은 일본 군수공업의 발달에 따라 이 부문에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취업했기 때문이다.

조선인노동자의 대부분은 인부, 토목공 등의 자유노동자이다. 각종 공업의 기타 직공도 대체로 비숙련공으로서 공장내 잡역에 사역되는 것을 상례로 하고, 다만 경시청(도쿄: 필자주), 오사카, 아이치, 시즈오카 등의 각 廳府縣 관하의 고무, 초자, 전기, 출판, 식료품공업에 사역되는 직공 및 오사카, 효고, 아이치, 시즈오카, 기후, 시가, 후쿠이, 오카야마, 히로시마, 와카야마 등의 방적·직물·제사 등의 각 공장 여공 중에 비교적 숙련공이 많고, 기타 후쿠오카, 홋카이도, 효고, 아이치, 후쿠시마, 야마구치, 오이타 등의 광산·炭坑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 상용광갱부 일부가 존재하는 것은 특수한 예다⁸⁾.

요컨대, 조선인은 하등 기능도 없이 도일했기 때문에 숙련이 필요 없고 완력만 있으면 되는 단순근육노동에 종사하는 자유노동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장직공이라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공장 잡역 등에 종사했다. 광갱부의 경우에도 상용광갱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2. 客觀的 條件

제일조선인의 노동운동을 발생시킨 객관적 조건은 한마디로 그들의 실업과 빈곤, 주거난,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민족적 차별대우 등이다.

가. 실업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불황이 심각했던 1930년대 전반기에 특히 在日朝鮮人の失業

8) 앞의 책, 제3권 1, 37쪽.

이 심각했다. 불황기엔 별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재일조선인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해고의 대상이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조선인의 무직자 비율이 1925년 16%, 1930년 18%, 1932년 29%, 그리고 1933년 35% 등으로 매우 높고, 불황의 심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실업의 심각성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1932년말 교토 시내의 조선인 노동자 중 38.1%, 日雇勞動者에 한정한다면 56.5%가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조선인 노동자 3명 중의 1명이 실업상태에 있고, 교토 시내의 실업자 2명 중의 1명이 조선인으로 실업률은 일본인 노동자의 10배나 된다⁹⁾.

1925년부터 일본의 실업구제사업은 대도시와 그 관계 府縣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여기에서도 조선인 실업자는 차별을 받는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많은 나고야 거주 조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실업구제 토목사업에 등록했지만 실업등록자의 실제 취로기회는 일본인에 비하여 훨씬 적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것에 따른 수입도 적게 되어 생활비 부족상태에 놓여졌다. 즉 재일조선인은 생활이 곤궁한 실업자를 공평하게 구제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공공토목사업에 있어서 등록할 때에는 불리한 규정 때문에 인원을 제한받았고, 취로기회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나고야에서만 있었던 특수한 사정은 아니고 당시 다른 지역에 在住하고 있었던 조선인에게도 공통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¹⁰⁾.

실업구제사업은 사전에 각지의 직업소개소에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등록방식에는 시행지 거주 최저기간의 설정, 경제상태의 심사 등의 등록자조건을 규정하여 등록이 인정된 자에게 사진이 들어 있는 수첩을 배포하는 「勞動手帳制度」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등록자의 수를 대폭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실시에 따라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동이 잦았던 재일조선인의 취로사정은 한층 어렵게 되었다.¹¹⁾

실업자 등록시에 불이익을 받았던 재일조선인 실업자는 등록후에도 취로기회가 일본인보다 훨씬 적어 차별을 받고 있었다.

조사대상 노동자는 2,000명이었는데 그 중 조선인은 전체의 약 64%인 1,270명이었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1개월간 취로일 10일 이하의 자가 58.06%이고, 21~30일 취로한 자는 27.8%였다. 한편 조선인의 경우에는 1개월간 취로일 10일 이하의 자가 전체의

9) 後藤耕二, 「京都における在日朝鮮人をめぐる状況-1930年代-」,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1號, 1991年 9月, 38쪽.

10) 金廣烈, 앞의 논문, 46쪽.

11) 金廣烈, 앞의 논문, 40쪽.

90.11%이고, 21~30일 취로한 자는 고작 2.3%였다.¹²⁾

조선인은 취로일수가 적기 때문에 일본인에 비하여 당연히 수입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인의 1인당 平均月收는 약 17.76엔인 반면, 조선인의 경우에는 약 절반인 9.47엔밖에 되지 않았다¹³⁾.

상술한 재일조선인의 고실업과 실업구제사업에 있어서 차별대우는 조선인의 빈곤을 초래하고, 그것은 노동운동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나. 임금 기타 노동조건

재일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있어서 커다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인 자신들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기술과 숙련을 갖지 않은 조선인 노동자가 일반 일본인 노동자와 자유경쟁을 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낮은 노동조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그 취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노동조건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예記하면 즉,

- ①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그것보다 임금이 낮은 것.
- ② 노동시간이 보다 긴 것,
- ③ 위험이 따르는 일, 더러운 일, 힘든 일이라는 것¹⁴⁾이다.

<표 2>는 1921년 일본 전국평균 민족별 임금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직종에 있어서도 조선인의 임금은 일본인의 그것에 비하여 대체로 50~60%대에 이르고 있어서 민족별 차별임금을 나타내고 있다.

市原 博은 홋카이도 소재 住友鑛山歌志內鑛山에 관한 연구에서 1940년 조선인 광부의 임금은 1일 평균 2.30엔으로 일본인의 임금 3.40엔에 비하여 30% 정도 낮은데, 이것은 능률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⁵⁾.

12) 金廣烈, 앞의 논문, 45~46쪽.

13) 金廣烈, 앞의 논문, 46쪽.

14) 東京府 社會課, 「在京朝鮮人勞動者의 狀況」, (1929), 朴慶植 編, 앞의 자료, 제2권 2, 971쪽.

15) 市原 博, 「戰時下 朝鮮人 炭鑛勞動의 實態」, 日帝36年史研究會·曹溪宗在日總本山高麗史 主催 朝鮮人強制運行에 관한 國際심포지엄, 1992, 70쪽.

그러나 노동과학연구소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일본인조와 조선인조를 편성하여 채탄능률을 비교한 결과, 1941년 11월부터 1942년 1월의 3개월에 걸쳐 일본인의 1인당 채탄량은 매월 각각 5.04噸, 4.1噸, 4.43噸이었는데 비하여 조선인의 1인당 채탄량은 각각 5.01噸, 4.57噸, 4.45噸으로 비슷하거나 또는 조선인의 경우 약간 더 높았다.¹⁶⁾

상술한 것 이외에도 조선인은 불황기에는 일본인에 비하여 한층 더 심한 임금인하를 한다든지¹⁷⁾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집을 잘 빌려주지 않아서 조선인이 借家難에 봉착한다든지¹⁸⁾ 하여 생존 자체가 언제나 위협을 받고 있었다.

<표 2> 민족별 임금(전국, 1921년)

(단위 : 円, %)

	일본인 (A)	조선인 (B)	(B) / (A)
農 作 夫	1.64	0.92	56
染 物 職	1.90	1.25	66
洗 濯 職	1.80	1.20	67
煙草製造職	1.61	0.93	58
上 木 工	2.30	1.30	57
荷物運搬人	2.50	1.60	64
職 工	1.80	1.10	61
坑 夫	2.20	1.30	59
雜 役	1.20	0.70	58

자료 :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1965, 36쪽에서 필자 재구성.

상술한 노동계급의 주체적 성장(노동자수의 증가)과 객관적 제조건의 열악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재일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의식을 가진 지식인 엘리트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6) 勞動科學研究所, 「炭坑における半島人労働者」, 朴慶植 編, 앞의 자료, 第5卷, 769쪽.

17) 이에 관해서는 全基浩, 「일제하 재일한국인노동자계급의 형성」, 『노동경제논집』, 제17권 제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4, 참조.

18)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全基浩, 「日帝下 在日朝鮮人の 借家難에 대한 研究」, 『경제학연구』, 제12호, 경희대학교 경제연구소, 1996, 참조.

Ⅲ. 在日朝鮮人 勞動運動의 基礎로서의 親睦扶助組織과 共濟的 勞動團體의 組織

재일조선인 사회의 운동과 친목부조조직의 관계를 史料를 통하여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外村 人이다. 여기서는 그의 논문¹⁹⁾에 의거하여 이것을 기술해 보기로 한다.

外村 人에 의하면 재일조선인 사회의 조직과 운동은 조선인 飯場頭나 勞動下宿主를 중심으로 조직된 소규모의 친목부조단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일조선인운동의 일부분인 노동운동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고, 그러한 소규모의 친목부조조직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外村 人은 친목부조단체와 노동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비록 고베市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함으로써 조선인운동이 사회주의계 단체의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종래의 시각을 탈피하고, 재일조선인 사회의 운동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연속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1920년대에 재일조선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사회집단으로서의 재일조선인이 형성되고, 재일조선인 사회가 성립되어 간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 사회 안에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조선인이 끼어들었다는, 즉 단지 인구가 증가해 갔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 거주, 생활의 場에서 일본인과는 구별되어 존재하는 조선인이 증가해 갔다는 것이다.

1. 在日朝鮮人 社會의 基礎單位로서의 相互扶助的 小集團

당시 조선인 토공, 즉 토목건축노동자는 주로 조선인이 경영하는 飯場²⁰⁾에서 생활하

19) 外村 人, 「親睦扶助團體と在日朝鮮人運動」,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3號, 1993.9, 105~136쪽 所收.

20) 飯場은 광산노동자나 토목공들의 합숙소로서 노동자들은 요금을 내고 여기서 먹고, 자고 일을 한다. 이를 경영하는 자를 飯場의 親方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광산, 토목공사나 일용인부의 청부업자이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조선인이 경영하는 飯場에서 일을 했다. 1925년 아이치현의 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하숙하는 노동자들로부터 평균 1일 70~80전을 받는다. 더욱이 하숙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親方의 지휘에 따라서 일하고, 親方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 그때 親方은 日收의 약 15~20%를 구전으로 받는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어와

고 있었다. 外村 大는 1925년 시즈오카縣 오야마町의 富士紡工場의 震災復舊工事 등의 모습을 행정당국의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 공사현장에서는 일본어를 아는 飯場頭를 중심으로 20인 정도의 조선인이 독자의 노동과 거주와 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조선인이 일본인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飯場(조선인 飯場頭가 경영하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아는 조선인 飯場頭가 현장감독이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도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시즈오카縣의 한 방적공장에 관한 보고에서는 남자 7명, 여자 42명의 집단을 '世話係'라는 인물이 통솔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선인 世話係는 일본어를 알기 때문에 회사와 조선인 공원 사이에 介在하여 일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인물로 世話係가 이동하면 다른 조선인 노동자도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방적공에서도 토공의 飯場頭에 해당되는 世話係를 중심으로 조선인 獨自의 통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광부의 거주와 노무관리에 있어서는 조선인만의 통합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佐賀炭坑과 같이 조선인 納屋頭²¹⁾를 두어 오로지 조선인만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상술한 것 이외에 재일조선인의 대표적인 직업으로서 도시의 일고노동자나 공장노동자가 있다. 이 경우에도 노동현장에 통근하는 단신노동자를 숙박시키는 조선인만의 勞動下宿이 존재한다.

勞動下宿이란 노동자용의 싼 하숙(조선인의 경우 판자집도 많음)으로 점차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취직처나 주택이 확실치 않은 新規渡日者에게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편리한 존재였다.²²⁾

이상에서 定住的이 아닌 단신노동자를 중심으로 도일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20년대에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달라도 飯場頭나 勞動下宿主라는 '親方層'을 중심으로 거주와 장이나 노동을 함께 하여 조선인의 통합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단신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룬 定住層的인 조선인의 증가가 현저해짐에 따라 일본인 사회와는 구별되는 조선인의 생활공간은 한층 넓어져

일본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교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飯場의 親方은 노동자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과 동시에 중간착취기관이기도 하다. 또한 飯場은 공사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또는 공사의 완료와 함께 자주 이동해 간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納屋制度란 坑夫들을 納屋(小屋)에 거주하게 하고, 納屋頭가 坑夫의 일상생활의 관리로부터 坑내로동의 지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담당하고, 더욱이 坑夫들을 인신적으로 예속시키고 또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반봉건적인 노동관계를 말한다. 中村政則 『勞動者と農民』(文庫版), 小學館, 1990, 145쪽, Donald·Smith; 『1932年 麻生炭坑爭議における勞動者同士の團結と對立』, 『在日朝鮮人史研究』第25號, 1995.9, 40쪽에서 再引用.

22) 外村 大, 상계논문, p. 107.

소위 조선인 부락이 형성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아온 飯場이나 勞動下宿 등의 '點'의 재일조선인 공간이 점차로 일부에서는 '面'이 되어 재일조선인 사회가 형성되어 갔다.²³⁾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함께 1920~30년대에 일본 각 지역에서 수십인 정도의 조선인 조직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였다.

이러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 簇生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의 재일조선인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당시 재일조선인의 대부분은 노동재해나 질병시의 휴업에 대한 보장이 전무한 상태에 있었고, 고용 또한 불안정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조선인 동료의 상조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내무성 사회국의 史料 등으로부터도 확인될 수 있지만 상호부조조직의 대부분은 질병시에 대비한 돈의 적립에 의한 共濟, 그리고 직업소개를 구체적인 활동으로 하고 있었다.²⁴⁾

外村 大는 飯場頭들의 연대조직으로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상호부조단체의 예로서 시즈오카縣 오야마町의 朝鮮人勞動友和會를 들고 있다. 또 그는 '融和親睦系'로 분류되는 단체나 취지에 '內鮮融和'의 말이 들어 있는 단체도 반드시 '反動團體'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한다.

親方層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부조적인 연대가 있고, 그것이 행정이나 자본가가 관여한 내선융화단체로 통합되어 간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계급적·민족적 입장의 사회운동단체로 되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것은 그러한 상호부조조직이 이데올로기에 따라 통합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소집단의 지도적 존재인 親方層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親方層의 이중성이란, 그들은 한편으로는 조선인 노동자의 중간착취자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수입을 보장받기 위하여 노동재해나 질병, 저임금이나 미불임금, 해고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하지만 親方層을 중심으로 하는 재일조선인 사회내의 기초적인 단위라고 해야 할 상호부조적인 소집단은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직이지만, 입장은 유동적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²⁵⁾

23) 外村 大, 앞의 논문, 108쪽.

24) 外村 大, 앞의 논문, 109쪽.

25) 外村 大, 앞의 논문, 112쪽.

2. 親睦扶助團體와 在日朝鮮人運動의 關係

外村 大는 친목부조단체와 재일조선인운동의 관계를 고베市를 대상으로 사료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全協의 조직은 조금 다르지만 1920년대 초두에 친목부조단체를 만들고 있었던 親方層들이 그 후에도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산하의 神戶朝鮮勞動同盟會(1925년 3월에 설립)나 역시 그 산하조직인 1929년의 兵庫縣朝鮮勞動組合(兵庫縣朝勞)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1930년대에 만들어진 神戶合同消費組合(全協系)이나 神戶朝鮮人消費組合, 그리고 여러 조선인의 연합단체에 참가하고 있어서 운동은 계속성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1930년대의 동향도 2개의 소비조합과 그 산하에 또는 그 외부에 있는 상호부조조직을 포함하여 크게 보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중앙집권적으로 상부단체가 하부조직을 통제적으로 움직이는 단일의 조직은 아니지만 여러 집단이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30년대의 그러한 총체로서 총괄된 운동은 모두 재일조선인 獨自의 생활문제에 대처해 간다는 점에서 일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이상을 정리하면 이 시기의 재일조선인운동은 생활을 지키기 위한 상호부조적인 조직이 기초가 되어 그것이 재일조선인 사회내에서 여러 가지로 연대되어 전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때로는 일부의 단체는 일본의 사회주의운동과 교류를 가진 다든지 그 강력한 영향하에 두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니었다. 특히 1930년대에는 명분으로는 일본공산당의 운동은 민족을 초월한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로서 조선인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재일조선인운동 총체의 동향을 보면 여전히 조선인 동지의 사회적 결합이 기초가 되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요소가 컸다고 할 수 있다.²⁷⁾

外村 大의 논지는, 비록 더 많은 사료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하겠지만, 그동안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점에 착안한 卓見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시각은 고베市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이 거주했던 모든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1930년대 각지에서 일어난 재일조선인에 의한 소비조합운동이나 기타 생활을 지키려는 운동을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재일조선인의 운동이 일반적으로 親方層에 의한 상호부조적 소집단에 기초를

26) 外村 大, 앞의 논문, 118쪽.

27) 外村 大, 앞의 논문, 118~119쪽.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노동조직이 이를 기초로 해서 조직되었던 것은 아니다.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이후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상술하겠지만 다음에는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이전의 계몽적·공제적 성격의 주요 노동단체들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3.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以前の 主要 共濟的 勞動團體

內務省 警保局의 자료²⁸⁾에 나와 있는 주요 노동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 朝鮮人貯金會

1919년 8월 당시 大阪府 東成郡 城東村 大字鶴野에 거주하고 있던 朴敬道가 발기한 모임이다. 본회는 조선인 직공을 회원으로 하여 매월 1일 및 15일에 50전씩 공동저금을 하고, 저금의 일부를 떼내어 회원의 질병·사망 기타의 경우에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朴敬道는 조선인을 상대로 하숙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후 회장 朴敬道가 歸鮮하게 되어 1920년 5월 1일 해산하고, 朴敬道로부터 하숙업을 인계한 李致文이 다시 일으켜 救助費를 증액하고, 해고자의 구제에도 유의하게 되었다.

나. 鮮人勞動民友會

1920년 1월 아이치縣 아이치郡 御器所村 大字御器所에 거주하는 조선인 韓光洙가 발기한 모임이다. 본회는 본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일치협력하여 근면저축을 장려하며 특히 지식보급에 노력하여 인격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부는 아이치縣 나고야市에 두며, 장래에는 간사이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경찰은 韓光洙와 고문 張琫洙가 모두 甲號 요시찰인물로 격렬한 배일 사상을 가진 자라고 보았다.

다. 京都朝鮮人勞動共濟會

1920년 5월 15일 조선인 노동자 裴鏞星 外 2명이 발기하여 설립되었다. 본회는 교토에 거주하는 조선인노동자의 친목을 도모하고, 환난을 相救하며, 나아가서는 저축의 장

28) 內務省 警保局, 「朝鮮人概況」, 朴慶植, 앞의 자료, 92~94쪽 및 139~140쪽.

려 및 지식의 계발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회장은 京都帝大學生 李順鐸이며, 부회장은 노동자 裴鏞星으로 대학생과 노동자의 연합조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본회의 사업으로는 환난구제, 직업소개, 교육, 기타 노동상황 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회원은 30명 정도였다.

라. 朝鮮勞動濟進會

1920년 5월 20일 고베市 筒井町에 거주하는 인삼행상업을 하는 金永達의 발기와 關西學院 中學部生徒 羅樞健, 神戶高商學生 金義銘, 川崎造船所職工 鄭勢寬, 下宿業 李義升의 찬동을 얻어 조직되었다. 본회의 목적은 고베市 거류 조선학생 및 조선인 노동자간의 상호연락, 구제 및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지식의 계발, 품성의 향상, 위생의 장려, 직업소개, 회보 또는 지방선전, 저축장려, 환난구제, 노동상황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였다.

회장은 金永達이며, 조직 당시의 회원은 약 70명이었다.

마. 東京勞動同志會

재경조선인노동자의 상호친목을 도모함과 지식의 계발, 인격의 수양을 목적으로 洪承魯의 발기로 1917년 1월 23일에 조직되었으나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본회는 사실상 苦學生同友會로 변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바. 東京朝鮮勞動同盟會

노동자의 구제 및 인격향상을 목적으로 1922년 11월에 창립되었다. 사무소는 市外 淀橋町角筈 725에 두었으며, 총회원수는 60명이었다. 간부는 李憲, 崔甲春, 白武, 孫奉元, 李鈺, 柳震杰, 金天海, 姜大鷄 등으로 대부분 뒤에 조직되는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다. 「勞動同盟」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또한 白武, 李憲 등은 1923년 6월에 在日本朝鮮無産青年會를 설립하였다.

사. 大阪朝鮮人勞動同盟會²⁹⁾

1922년 12월 1일에 창립되었다.

그 강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들은 결속의 위력에 의하여 계급투쟁의 승리를 획득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생존권 확립을 도모한다.
- ② 우리들은 우리의 膏骨을 착취하는 자본제도를 타파하고, 생산자를 본위로 하는 新社會의 건설을 도모한다.

집행위원회 간부로는 위원장 宋章福, 서기 金淵錫, 회계 金烈鳳, 집행위원 池建弘, 崔泰烈, 洪佑瑞, 梁班錫, 尹海草, 張達奎, 金公海 등이 선출되었다.

東京朝鮮勞動同盟會와 大阪朝鮮人勞動同盟會는 모두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共濟的 노동단체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그러나 그 사업에는 患難相救, 직업소개, 노동자의 구제 등 공제적·복리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제적 성격도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노동단체가 1925년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의 창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IV. 民族解放 및 階級解放運動의 統一體로서의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여기서 統一體라고 하는 것은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이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통일적으로 추구하는 운동단체라는 의미와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의 전국적 통일조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1.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의 創立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이하 在日朝鮮勞總이라 함)은 一月會系³⁰⁾의 주도로 재일조선

29) 野村名屋, 「朝鮮勞動同盟會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 第5號, 1979. 12, 74~80쪽에 의거하였다.

30) 北星會를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만든 공산주의계 단체로서 1925년 1월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一月會라고 부른다. 李如星, 安光泉 등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강령에서는 ① 大衆木位의 新社會 실현을 도모한다. ② 모

인 노동운동의 전국적 통일조직으로서 1925년 2월 22일에 창립되었다.

在日朝鮮勞總은 단체가입의 원칙 아래 12개 단체 800명으로 출발했다. 12개 단체는 도쿄의 경우 東京朝鮮勞動共生會, 東京朝鮮勞動同盟會, 朝鮮人勞動同志會, 간사이 지방의 경우 神戸朝鮮勞動同盟會, 京都朝鮮勞動同盟會, 그리고 오사카의 경우 大阪朝鮮勞動者同盟會, 堺朝鮮勞動同志會, 西成朝鮮勞動同盟會, 大阪共濟會, 今福朝鮮勞動組合, 鶴町朝鮮勞動組合, 城東朝鮮勞動同盟會로서 도쿄, 오사카, 간사이의 노동단체로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창립 당시 채택된 강령과 주장은 다음과 같다.³¹⁾

<강 령>

- ① 우리는 단결의 위력과 상호부조의 조직으로 경제적 평등과 지식계발을 도모한다.
- ② 우리는 단호한 용기와 유효한 전술로 자본가계급의 억압과 박해에 대해서 철저히 투쟁할 것을 도모한다.
- ③ 우리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 양립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노동조합의 실력으로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 평등의 신사회 건설을 도모한다.

<주 장>

- ① 8시간 노동과 1주간 48시간제
- ② 최저임금의 설정
- ③ 악법의 철폐
- ④ 메이데이의 일치적 휴업
- ⑤ 경제적 행동의 일치적 협력

2. 在日朝鮮勞總 組織의 發展

1925년 2월에 결성된 勞總은 조직을 확대해 갔지만 1925년 및 1926년에는 방침상으로도 추상적인 것에 머무르고, 조선인의 쟁의건수·참가인원수도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그 활동은 위로부터의 조직화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된다³²⁾.

든 압박과 착취에 대하여 계급, 성, 민족을 불문하고 민중과 함께 조직적으로 투쟁한다. ③ 엄정한 이론을 천명하여 민중운동에 供資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31) 金仁德·外村 大 譯,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についての一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6號, 1996. 9, 76~77쪽.

32) 外村 大, 「在日朝鮮勞動總同盟に關する一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第18號, 1988. 10, 50쪽.

따라서 在日朝鮮勞總은 1926년까지는 조직화에 주력했다.

그리하여 1926년 10월말에는 이미 가맹단체 25개 조합, 그 인원 9,000명을 포섭하는 隆盛을 보게 되었다³³⁾.

在日朝鮮勞總 조직의 발전은 지역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었고,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진전되었다. 즉 1926년 1월에는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오사카, 교토 및 효고의 각 府縣의 노동단체를 통일시키는 關西朝鮮勞動連合會가 조직되고, 또 동년 3월에는 간토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도쿄, 가나가와 및 야마나시 각 府縣의 노동단체를 통일시키는 關東朝鮮勞動連合會가 성립되었다³⁴⁾.

關東朝鮮勞動連合會에는 도쿄 방면으로는 朝鮮勞動同盟會, 關東朝鮮勞動一心會, 東京朝鮮勞動共生會, 朝鮮合同勞動組合 및 同支部, 東京朝鮮勞動組合, 東京赤星勞動組合, 朝鮮勞動會, 東興勞動同盟會, 朝鮮赤衛勞動同盟會가 포함되고, 가나가와 방면으로는 山梨縣朝鮮勞動組合이 포함되었다. 또한 關西朝鮮勞動連合會에는 오사카 방면으로는 堺朝鮮勞動同志會, 大坂朝鮮勞動同盟會, 在大坂朝鮮勞動組合, 鶴町朝鮮勞動組合, 泉尾朝鮮勞動組合, 今福朝鮮勞動組合, 大坂西成朝鮮勞動同盟, 大坂浪速朝鮮勞動組合, 大坂天王寺朝鮮勞動組合, 朝鮮勞動連珠會가 포함되어 있고, 교토 방면으로는 日本朝鮮總同盟 京都同盟會, 그리고 효고 방면으로는 神戶朝鮮勞動同盟會가 포함되었다.³⁵⁾

1926년 시기에 在日朝鮮勞總은 4대운동인 3·1운동 기념투쟁, 메이데이투쟁, 관동진재 조선인학살 추도회, 국치일 기념투쟁을 주도했다.³⁶⁾

3. 民族解放運動과 階級解放運動의 統一

재일조선인 노동자들은 당시 民族矛盾과 階級矛盾이라는 이중의 질곡 속에 놓여져 있었다. 한편으로는 식민지 노동자로서 더욱이 일본 사회 속에서 일제 당국과 일본인들의 온갖 억압과 민족차별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일본 자본의 격심한 착취 속에서 생계를 유지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욱이 일본경제의 1920년대의 불황과 세계대공황 속에 빠져들었던 1930년대의 대불황 속에서, 그리고 조선내에서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전계급적으로 몰락한 농민들의 大量 渡日로 인한 엄청난 과잉노동력의 존재로 말미암아 재일조선인 노

33) 內務省 警保局, 大正15年中二於ケル「在留朝鮮人の狀況」, 朴慶植 編, 앞의 자료, 제1권, 217쪽.

34) 朴慶植 編, 앞의 자료, 217쪽.

35) 朴慶植 編, 앞의 자료, 216쪽 표 참조.

36) 金仁德,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84~85쪽.

동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실업과 빈곤과 기아와 차별뿐이었다. 그들은 그 원인이 일제와 조선식민지간의 민족모순과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계급모순에 기인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또는 지식인 엘리트를 중심으로 자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질곡을 벗어나는 길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在日朝鮮勞總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것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었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은 민족해방이나 계급해방이나, 또는 어느 것이 먼저냐 식의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양자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통일되어 있고, 일체화되어 있는 개념이었다. 조선이 帝國主義 國家로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길만이 민족해방의 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한층 부추긴 것이 1917년의 러시아혁명의 성공이었다.

在日朝鮮勞總의 강령 속에 이러한 목표가 뚜렷이 부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강령 '다'항에서 "우리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 양립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노동조합의 실력으로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 평등의 신사회 건설을 도모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계급문제에 대한 은유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이나 민족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일본 좌파세력과의 연대와 일본 관헌의 노골적인 탄압의 회피라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민족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일본 좌파세력이나 노동자계급과의 연대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일본 관헌의 노골적인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계급문제를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것도 또한 일본 관헌의 집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在日朝鮮勞總이 정권획득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노동운동조직이라는 점도 그러한 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在日朝鮮勞總이 조직의 핵심분자들이나 조직계통으로 보아 공산주의계이고, 그 강령 속에 노동계급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노동계급의 해방을 운동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在日朝鮮勞總이 강령에서나 실천에서나 민족해방을 부각시킨 것은 제3회 대회가 개최되었던 1927년부터다. 우선 제3회 대회의 강령과 당면 투쟁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⁷⁾

<강 령>

- ① 본 동맹은 조선 무산계급의 지도적 정신에 따라서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고, 민족

37)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第3回 大會 宣言·綱領·規約』(1927. 4. 20), 『在日朝鮮人史研究』, 創刊號, 1977. 12, 98~99쪽.

적 해방을 도모한다.

- ② 본 동맹은 일본 각지에 산재한 미조직 조선노동대중의 조직을 도모한다.
- ③ 본 동맹은 일본 무산계급과 국제적 단결을 도모한다.

<당면 투쟁조건(요약)>

- ① 조선민족의 전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전민족적 單一黨의 수립과 그것을 위한 新幹會의 적극적 지지.
- ② 일본 유일의 무산계급정당인 勞農黨의 정치적 지도의 승인과 그것에 대한 적극적 지지
- ③ 치안유지법 등 일체의 폭압법령의 철폐
- ④ 일본의 보통선거의 철저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 ⑤ 渡日 조선노동자의 渡航의 자유.
- ⑥ 東拓 및 不二興業會社의 이민 반대
- ⑦ 단결권, 파업권, 단체계약권의 확립
- ⑧ 최저임금제의 실시와 8시간노동제의 확립
- ⑨ 조선노동자 및 청소년 남녀에 대한 민족적 학대와 혹사의 근절
- ⑩ 冤罪 및 부당구속에 대한 배상요구
- ⑪ 여성, 白丁 및 奴僕에 대한 차별철폐
- ⑫ 조선무산대중에 대한 무산계급적 정치투쟁의 교육 및 훈련의 실시

在日朝鮮勞總은 민족해방이라는 목표를 강령에서 분명히 내세우고 그 실천적 당면과제까지 제시하고 있다. 당면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선민족 단일당의 건설을 내세우면서 일본 무산계급 정당과의 연대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동대회 선언에서는 “우리의 대다수는 자유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조합의 형태는 직업별·산업별 기준으로 구성할 수 없었다. 그뿐만은 아니다. 우리의 대다수는 언어의 불통, 감정의 불일치, 습관의 相異, 지식의 부족, 기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실상 일본노동조합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과도기에 있다”³⁸⁾고 하여 조선인 獨自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문제의 부각은 1927년 초의 ‘方向轉換論’에서 출발하여 4월의 제3회 대회에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동년 여름의 朝鮮總督暴壓政治 反對運動에서 구체적 실천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조선총독폭압정치 반대운동은 조선내에서의 사립학교 폐쇄와 일본

38) 앞의 책, 97쪽.

인에 의한 조선인의 학대 등 민족적 억압폭력적 통치를 고발하는 데서 출발하여 조선 공산당의 공판 개시와도 관련되어 일본의 조선 지배를 비판하는 운동이었다.

그 운동형태는 주로 노총 산하의 각지의 朝鮮勞動組合(당년의 노총 제3회 대회에서 一府縣에 一組合을 두도록 하고, 그 밑에 다시 支部, 班이 두어짐)이나 그 지부의 주축으로 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이다.³⁹⁾

이 운동을 통해서 在日朝鮮勞總이 얻은 효과에 대해서 外村 大는 노총이 비로소 통합된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점, 노총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민족적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노총의 조직적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점, 조일연대의 면에서도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는 점(일본인의 운동 참가, 新幹會 各地會 및 勞農黨支部 後援이라는 운동형태, 교토에서는 朝勞 등 조선인 단체와 일본인 좌파 무산단체에 의한 '暴壓對策協議會'의 결성과 활동 등), 조선내의 상황에 대한 참여와 조선내 사회운동과의 연대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⁴⁰⁾

그러나 이 운동은 노총을 질적·양적으로 발전시킨 반면, 정치편중의 경향을 초래하여 운동을 대중과 유리시키는 나쁜 영향도 미쳤다. 특히 1928년 초에 三總(朝鮮勞動總同盟, 農民總同盟, 青年總同盟)의 활동의 해금을 요구하는 三總解禁運動이 계획되고, 이를 위한 三總解禁同盟이 조직되는 등 정치과제가 한층 고도화되면서 그러한 위험성은 한층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在日朝鮮勞總은 1928년 1~5월의 各支部·朝勞·勞總大會⁴¹⁾를 거쳐 日常經濟鬭爭 輕視에 대한 자기비판을 가하여 이와 같은 결점을 극복하면서 한층 더 발전해 갔다. 그 결과 많은 대중을 획득하여 지부 등의 신설이 이어졌다. 규슈, 니가타, 도야마 등에서도 朝勞의 결성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1928년에 들어서서 제일조선노총은 支部·班을 통한 정치적 주장의 선전, 쟁의의 수행을 하고 노동자를 조직할 역량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때까지의 운동이 위로부터의 조직화나 연설회에의 단순한 동원이라는 형태였음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각 지부 반이 수행하는 밑으로부터의 운동을 통한 조직화로 변화해 갔던 것이

39) 外村 大,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に關する一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第18號, 1988. 10, 51쪽.

40) 外村 大, 앞의 논문, 51~52쪽 참조.

41) 在日朝鮮勞總은 제3회 정기대회 이후 각지에 분산적으로 조직된 조합을 정리·통합하려는 목적으로 '一府縣 一組合' 원칙을 수립했다. 그리하여 최고기관으로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중앙(도쿄에 둠)이 있고, 各府縣에 組合(여기서 朝勞란 바로 이것을 가리킴)이 있고, 그 밑에 지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지부를 편의에 따라서 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관동, 관서로 나누어 연합회를 개최했으며 이것을 규슈, 시코쿠, 간사이, 간토, 홋카이도로 나누어 지방별 협의회를 열었다. 즉 반→지부→조합→(협의회)→총동맹의 체계를 확립했다. 金仁德, 『식민지시대 제일조선인운동연구』 127쪽.

다.⁴²⁾

각 府縣의 朝鮮勞動組合과 支部·班은 중소기업이나 토목공사 현장에서 해고수당, 勞災補償, 체불임금의 지불이라는 요구와 쟁의를 비록 분산적이기는 했지만 주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이라는 정치적 과제에 관한 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재일조선노총은 1928년에 조선내의 탄압과 間島共產黨 사건에 대한 항의, 合併記念, 震災記念日 운동 등 일본의 조선지배 총체를 공격하는 정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在日朝鮮勞總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 양자의 적절한 혼합전술을 구사했던 것이다. 일상생활에 관련된 밑으로부터의 경제투쟁은 조직의 강화와 확대를 일구어내는 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유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경제투쟁에만 집착하면 노동자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이익에 빠져들게 하여 식민지 노동자로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노동자들의 시민권과 노동권의 수호와 같은 더욱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통일,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1927년의 활동을 계승하여 1928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재일조선인노동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日常經濟鬭爭, 民族獨立運動, 日本社會運動에 대한 참가라는 장면에서 지부, 반 단위의 조직적·계획적인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시작되어 在日朝鮮勞總은 매우 강력한 전투성을 갖게 되었다⁴³⁾.

在日朝鮮勞總은 조직과 운동의 발전으로 1927년 4월에는 3만 312명의 동맹원을 가지게 되었다.⁴⁴⁾ 1928년 5월 13~14일 양일에 걸쳐 在日朝鮮勞總은 제4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의 선언에서는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이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일상의 경제투쟁에 중심을 두며, 미조직 조선노동자 대중의 조직에 결사적인 노력을 하여 조직노동자의 산업별 조직에 노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즉시 실현은 되지 않고, '一産業 一組合主義'는 이후의 단계에서 실현되게 되었다.⁴⁵⁾

1928년에는 일본 관헌에 의한 在日朝鮮勞總에 대한 대탄압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순조롭게 발전하던 재일조선노총은 활동을 거의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선

42) 外村 大, 「在日朝鮮勞動總同盟に關する一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第18號, 1988. 10, 52~53쪽.

43) 外村 大, 상계논문, pp. 54~55.

44) 金仁德, 外村 大譯,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についての一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6號, 1996. 9, 81쪽.

45) 外村 大, 앞의 논문, 84쪽.

관련 자료에는 8월 29일부터 탄압이 시작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동년 4월 21일에는 勞總 기타 在日朝鮮人團體를 가택수색하여 간부를 檢束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시기부터 朝鮮共產黨 日本總局의 파악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또 노총의 급성장에 대하여 관헌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관헌 자신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⁴⁶⁾

1928년 8월에서 11월까지 소위 '御大典'(天皇即位式, 同年 11월 10일)을 이유로 각지에서 在日朝鮮勞總 간부를 비롯한 수많은 조선인이 검속된다. 이러한 탄압은 그 이후에도 매년 계속되었다. 이러한 대탄압에도 불구하고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활동가들은 꾸준히 조직을 재건하고 활동을 부흥시켜 다수의 노동자를 획득했다.

1929년 6월, 在日朝鮮勞總의 조직을 보면 東京朝鮮勞動組合(12지부), 神奈川(4지부), 大阪(11지부), 京都(4지부), 兵庫·神戶(4지부), 富山(3지부), 中部, 三多摩, 新潟, 北陸朝鮮勞動組合(2지부)이 있었고, 名古屋, 群馬, 宮城, 廣島, 北海道, 四國에 조직이 준비중이었다. 9월에는 長野, 宮城, 廣島, 福島, 北海島, 四國에 지부 준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在日朝鮮勞總의 조직은 주로 도시 중심의 조선인 노동자, 특히 자유노동자의 조직률이 높았다.⁴⁷⁾ 활동의 활성화는 예비검속된 간부 중에서 朝鮮共產黨 日本總局 관계자로서 기소된 자를 제외하고, 조합에 복귀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무렵 청부제 철폐, 자유노동자상해보상법 획득, 부인·청소년노동자의 보호, 실업수당 획득 등에 관한 경제투쟁을 강화시켜 쟁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탄압으로 말미암아 전국적 연락에 의한 정치투쟁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의 전국적 통일체인 재일조선노총은 1928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프로핀테른 제4회 대회의 결정에 따라 日本勞動組合으로 통합·매몰된다. 또한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은 코민테른 '12월테제'(1928년)의 一國 一黨主義 원칙에 따라 해산된다.

在日朝鮮勞總은 1929년 12월 14일 오사카市 西成區에서 열린 전국대표자회의 및 확대중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 ① 노총은 '全協'에 가맹한다.
- ② 一産業 一組合主義 원칙에 따라 산업별 조합을 조직하고 그것을 규합하여 '全協'

46) 外村 大, 「在日本 朝鮮勞動總同盟に關する一考察」, 55쪽.

47) 金仁德,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240~241쪽. 1929년 6월 재일조선노총의 조직원은 근우회 동경지회 제3회 총회 의안에는 3만 5,717명이었으며(경찰 자료는 2만 3,500명으로 추산, 1925년(10월) 1,220명, 1926년(10월) 9,900명). 그리고 제3회 재일조선노총대회 중앙위원회 보고에서는 3만 312명이었다. 또한 일본경찰의 1928년 4월 통계는 2만 6,114명이었다. 241쪽, 주 15.

의 지도에 따라 勞總을 재조직하고 현조합은 투쟁과정에서 점차 산업별조직으로 변경한다.

③ 선언, 강령, 투쟁방침은 회의의 수정의견을 참조하여 상임위원에서 작성한다.⁴⁸⁾

在日朝鮮勞總은 원래 日本勞動組合評議會에 통합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으나 평의회가 일제에 의해 해산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즉각 실시되지 못하다가 全協⁴⁹⁾시기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결국 在日朝鮮勞總은 1930년대 전반기에 해체되어 全協으로 통합된다.

V. 民族運動의 階級運動에의 解消와 朝鮮人 生活擁護運動의 展開

1. 民族運動의 階級運動에의 解消와 問題點

재일조선인의 독자적·통일적 노동운동단체인 在日朝鮮勞總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一國 一黨主義, 나아가서는 一國 一組合主義 原則에 따라 해체되어, 일본의 좌익노동운동단체인 全協으로 통합된다. 이것은 물론 강력한 자본가계급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계급주의 원칙의 관철이다. 이 원칙을 따르면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의 통일적 운동은 불가능하게 되고, 민족운동은 계급운동으로 매몰·해소되어 사라지고 만다.

민족별 조합조직, 산업별이 아닌 합동노동조합의 형태로는 금일과 같이 계급대립이 급박한 정세에서는 강력한 투쟁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일체의 투쟁은 노동계급의 사령부, 당의 지도하에서만 강력하고 유효한 투쟁과 승리가 약속된다는 것이었다.⁵⁰⁾

그러나 이 원칙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해소를 진행시킨 측의 문장을 읽어 보면 그것은 조선내의 운동과 재일조선

48) 朴慶植 編, 앞의 자료집성, 제2권 1, 123쪽.

49) 全協(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 필자주)은 1928년 12월 23일 동경본소 공회당에서 평의회 후계조직으로 일본공산당의 지도 아래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일본노동운동에서 가장 전투적인 조직으로 1936년까지 일본에서 혁명적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국제연대를 강조하며 산업별 조직원칙에 따라 조직확대와 강화를 도모했다. 金仁德,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연구』 272쪽, 주 95.

50) 堀内 稔, 「兵庫縣における朝鮮人勞動運動」, 『在日朝鮮人史研究』, 第19號, 1989. 10, 33쪽.

인노동자를 단절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민족적 과제를 실천하기 어렵게 만들고, 경제투쟁에 관해서도 공장에 기초를 둔 산업별 정리와 같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이 방침이 기본적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권위에 의하여 강요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⁵¹⁾.

이와 같이 재일조선노총이 全協으로 해소·통합되면 민족해방과 같은 조선민족 지상의 과제는 해결될 수 없고, 조선내의 각종 사회운동과의 연계도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내에서 日인들의 갖가지 차별에 기인하는 재일조선인노동자들의 실업, 빈곤, 의료난, 주거난, 교육난 등으로부터 조선인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또한 일본인 노동자들까지 포함한 日인들의 각종 차별과 멸시 속에서 朝·日노동자가 동일한 계급의식으로 뭉쳐 자본가계급에게 대항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인노동자와 일본인노동자간에 발생한 수많은 충돌쟁투사건이나 조선인노동자가 쟁의를 할 때 많은 경우 일본인노동자들이 협력하지 않은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또한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선인노동자들 중에는 이동이 심한 자유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조직은 노동현장과 연계된 지역별 조직이 한층 효과적이다. 그리고 外村大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大工場에 기초를 둔 산업별 조직은 많은 조선인노동자를 배제시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조선인노동자들은 공장노동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大工場이 아니라 중소영세 공장에 취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인노동자들은 조선인이 경영하는 飯場이나 勞動下宿,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도시 변두리에 조선인 부락을 이루어 집단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 조직이 더욱 효과적일 수밖에 없었다.

민족운동을 계급운동으로 매몰·해소시켜 버리는 이러한 방침의 비현실성 때문에 많은 재일조선인노동자들은 全協에 참가하지 않고 다른 운동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朝鮮勞組의 참가 조선인 모두가 이들 全協系 組合으로 재조직된 것은 아니었으며, 재조직된 것은 오히려 소수였다.⁵²⁾ 이것은 물론 高陽縣에 관해서 말한 것이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했다.

사실 1929년 당시의 조선노총 가맹원 2만 3,530명 중에서 1930년 5월까지 全協으로 재조직된 것은 겨우 2,650명, 1931년 1월말 4,296명, 1932년말 4,862명(그 외에 全協失業同盟員 2,930명)으로 되어 있다.⁵³⁾

51) 外村大, 「在日朝鮮勞動總同盟に關する一考察」, 59쪽.

52) 『東播大衆新聞』, 1929년 9월 1일자.

高木 伸夫, 「滿州事變前後の勞動運動と在日朝鮮人勞動者」,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3號, 1993年 9月, 38쪽에서 再引用.

53) 松永 洋一, 「關東自由勞動組合と在日朝鮮人勞動者」,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號, 1978年 6月, 55쪽.

재일조선노동총의 全協에의 재조직이 거의 완료된 1932년말에도 全協으로 재조직된 인원은 재일조선노동원 전체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했으며, 全協의 절대적인 영향하에서 조직된 失業同盟員을 합치더라도 전체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면 全協으로 재조직되지 않은 在日朝鮮勞總員들은 어디로 갔는가.

在日勞總의 해체에 따라서 산하 각 조합 및 조합원은 다음의 넷으로 나뉘었다.⁵⁴⁾

- ① 全協에 가맹한 자
- ② 日本勞動總同盟이나 日本勞動組合總連合 등의 合法團體로 흘러간 자
- ③ 消費組合이나 東亞通航組合⁵⁵⁾과 같은 生活組合을 조직한 자
- ④ 解體하지 않고 獨白組合으로 남은 자

1930년대 재일조선인 인구가 증가해 가고, 더욱이 가족을 동반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해 감에 따라 재일조선인에게는 노동문제 이외에 주택의 확보, 아동교육, 의료위생, 생활물자의 확보 등 조선민족 독자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고 있었다. 그리고 在日朝鮮勞總이 全協으로 해소, 통합된 이후로는 조선민족 독자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全協과 같은 일본공산당 지도하의 운동에서는 재일조선인의 민족적 과제가 경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단체는 일본 관헌에 의한 강력한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으로는 조선인의 생활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在日朝鮮勞總 해소 후 그 조합원들이 흘러간 전술한 네 가지 흐름 중에서 ①항과 ②항은 조선인 독자의 운동이라고 할 수 없고, 조선민족 독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는 재일조선인 독자의 노동조합과 소비조합 중에서 전형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名古屋合同勞動勞組와 阪神消費組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名古屋合同勞組⁵⁶⁾의 勞動運動

이에 관하여 金廣烈의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자. 在日朝鮮勞總이 해체를 결정하

54) 谷合 佳代子, 「1930年代在阪朝鮮人勞動者のたたかい」, 『在日朝鮮人史研究』, 第15號, 1985. 10, 2쪽.

55) 東亞通航組合은 1930년 4월, 오사카 거주 조선인 중 제주도 출신자를 중심으로 제주도와의 渡航往來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선박이용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선입의 인하운동이나 伏丸 등을 구입하여 自主運航 등의 활동을 했다. 관헌은 이를 계급적 협동조합으로 보아 극좌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한때는 1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지부 및 분회 등을 조직하여 정치적·민족적 성격을 가진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관헌의 탄압과 경영난으로 1935년 2월에 해산했다.

56) '名古屋合同勞組'라는 명칭에서 '슈네'이라는 말은 나고야에 있는 조선인노동자를 총체적으로 망라한다는 뜻을

기 직전에 나고야에서는 기존 노조의 합동으로 愛知縣朝鮮勞組가 창립되었으나 在日朝鮮勞總의 해체방침에 따라 그것은 1930년에 全協과 합류하여 全協名古屋로 된다.

그러나 全協名古屋는 제일조선인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옹호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그 극좌모험적인 활동으로 '非合法團體'로서 엄격한 탄압을 받아 1934년 2월 이후에는 그 조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1930년대 전반 나고야에서는 노동조합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조선인노동자 독자의 단체가 많이 결성되어 있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단체는 在任朝鮮人勞動者의 문화적 계몽이나 생활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 활동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文化普及會와 半島青年團이다⁵⁷⁾.

나고야에서는 全協組織이 없어진 1934년말부터 조선인 문화·공제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단체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중심이 되었던 인물은 全協名古屋에서 운동 경험이 있는 申山祝, 朴廣海 등으로 그들은 그 이전의 극좌적 운동방침에 단지 추종하고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어떤 노동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합법적 조직'을 만드는 것에 합의했다.⁵⁸⁾

그리하여 1935년 2월 21일에 결국 名古屋合同勞組가 결성되었다. 名古屋合同勞組의 창립집행부는 在任 각 朝鮮人團體와 일본인노조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在任朝鮮人團體의 힘을 규합한 조선인 노동조합이었다.

동조합의 창립강령에는 그 지역의 전노동자계급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과 반민족단체와의 투쟁을 선언하는 민족적 운동의 성격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在日朝鮮勞總의 운동목표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名古屋合同勞組는 결성과정에서 각 조선인 문화·공제단체의 협력을 얻고 있었지만 결성 후에도 그들을 모체로 하여 세력을 확대해 간다. 名古屋合同勞組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각지의 조선인단체를 대중적 기반으로 한 지방단독조합이며, 조합원 총수는 약 400명이었다. 또 주변의 미에縣, 기후縣에도 支部나 영향단체를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1935년 6월 이후 申山祝, 石川友左衛門 등이 '中部地方連絡委員會'를 결성하여 豊橋合同勞組 및 시즈오카, 미에, 기후의 조선인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결과이다.⁵⁹⁾

가지고 있다. 1930년대 나고야에서는 노동조합의 형태가 아닌 조선인노동자의 독자적인 계몽단체나 공제단체가 많이 결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서 조직했다는 뜻이다. 또 이 조합은 '全協'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단체가 아니라 조선인의 노동문제, 생활문제의 해결, 문화계몽운동, 민족차별 반대운동 등 조선민족에게 관련된 독자적 생활문제 전반을 취급한 나고야 지방의 단독노조였다.

57) 金廣烈, 「1930年代名古屋地域における朝鮮人勞動運動」,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3號, 1993年 9月, 7쪽.

58) 金廣烈 앞의 논문, 8~9쪽.

다음으로 名古屋合同勞組가 지원한 활동을 보기로 하자.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민족차별 반대운동이다. 1935년 10월 1일 名古屋 大曾根 직업 소개소의 조선인노동자는 소장인 影山大齡이 “조선인은 無君主·無政府의 백성이기 때문에 보통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단속이 될 수 없다”는 민족차별의 폭언을 한 데 대해 데모를 감행했다. 名古屋合同勞組는 이 운동을 지도하여 全在名朝鮮人이 차별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소장은 폭언에 대하여 사과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약속이 되어 투쟁은 결국 승리로 끝났다.

名古屋合同勞組는 또한 やまと製鋼所의 쟁의를 지원하여 민족적·계급적으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었던 조선인노동자의 쟁의를 승리로 이끌어 내는 등 공장노동자의 쟁의를 지도했다. 이 노조는 야학경영과 문화계몽운동도 전개하여 조선어를 가르치고, 노동자의 의식을 높였다. 그 이외에도 국치기념일 등 민족기념일운동과 조선내의 태풍피해 동포돕기운동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동 노조는 일본인운동과의 관계에서 일본인 노동쟁의를 지원하고 중부지방 인민전선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그러나 名古屋合同勞組는 이러한 활발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연속된 관헌의 격심한 탄압을 받아 1936년 12월 사실상 활동을 중지했다.

名古屋合同勞組는 그 지역에 산재하는 다수의 조선인 문화·공제단체를 기반으로 결집한 地方單獨勞組로 당시의 재일조선인 운동 중에서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활동은 조선인노동자의 차별반대운동, 쟁의, 야학보급 등을 지도하는 이외에도 중부지방의 일본인 노동운동이나 인민전선운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운동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은 渡日 이래 경험한 여러 차별로부터 민족해방의 필연성을 생각하는 在住朝鮮人 활동가들이었지만, 거기에 지역의 좌익운동 재건의 꿈을 위탁한 소수의 일본인 활동가들도 참가하고 있었다. 1930년대 중기에 있어서 在住朝鮮人團體를 모체로 하는 단독노조가 같은 민족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조선인노동자의 운동을 지도함과 동시에 在日이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일본의 무산자 해방운동에도 협력하고 있었던 사례는 종래의 연구에서는 확인될 수 없다. 이때 名古屋合同勞組의 조선인 활동가가 중부지방 인민전선운동내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를 둔 것이지만, 그것은 傘協時代와는 다른 자발적 협력이라는 형태였다. 그렇다면 이 名古屋合同勞組의 운동은 어느 의미에서 초기의 在日朝鮮勞總이 추구하고 있었던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의 형태를 한층 구체화시킨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⁶⁰⁾

59) 金廣烈 앞의 논문, 11쪽.

60) 金廣烈 앞의 논문, 25쪽.

3. 阪神消費組合運動

여기서는 주로 堀内 稔의 논문에 따라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운동의 일환인 소비조합운동은 일본에서는 1924년경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그 핵심적 존재는 1920년에 창립된 關東消費組合連盟(關消連)으로 1924년말에는 가맹 조합 21개, 조합원수는 약 5,000명에 이르고 있다.

소비조합운동의 발전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생겨나 關消連 등이 중심이 되어 1932년 3월에는 日本無産者消費組合連盟(日消連)이 결성되었다.

창립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집행위원 중에는 金台郁, 金敬中(阪神消費組合), 尹赫濟(大同消費組合) 등의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다.

재일조선인의 소비조합은 1929년 4월의 오사카의 大同消費組合을 출발점으로 하여 1933년까지 계속 생겨났다. 즉 1931년에는 오사카의 新村里消費組合, 住吉消費組合, 泉州無産者協同組合, 아мага사키의 阪神消費組合, 교토의 共信消費組合, 가나가와의 多摩川無産者消費組合, 도쿄의 城北無産者消費組合, 一般消費組合이 조직되고, 이어서 1932년에는 오사카에서 槿愛消費組合, 大阪消費組合, 西成區津守町消費組合, 京南消費組合, 永信消費組合, 우리消費組合, 共濟消費組合, 共醒會消費組合, 가나가와에서는 湘南無産者消費組合이 각각 결성되었다. 그리고 1933년에는 오사카에서 東大阪消費組合, 高槻町朝鮮消費組合, 고베에서는 西神消費組合, 神戸合同消費組合, 와카야마에서는 紀和消費組合이 각각 조직된다.⁶¹⁾

이상은 좌익계로 보이는 소비조합으로, 그 대부분은 日消連에 가맹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민족주의계로는 神戸朝鮮人消費組合(1932년), 大同消費組合(1931년, 아이치), 中央消費組合(1934년, 아이치), 永信消費組合(1935년, 아이치) 등이 있었다⁶²⁾.

이들 재일조선인소비조합이 존재했던 기간은 비교적 짧았으나⁶³⁾ 오사카의 大同消費組合, 가나가와의 多摩川無産者消費組合이 비교적 오래 운동을 계속했고, 특히 아мага사키의 阪神消費組合은 가장 오래 존속했다.

이하에서는 阪神消費組合에 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阪神消費組合은 1931년 3월 20일 아мага사키市에서 창립되었는데, 이사장에는 安泰云, 이사에 金敬中, 朴魯聖 등이 선출되었다. 동 조합은 생활필수품의 구입, 생산가공, 기타 소비경제의 이익옹호를 목적으로 했다. 창립후 조합의 조직은 계속 확대되어

61) 堀内 稔, 「阪神消費組合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 第7號, 1980. 12, 2쪽.

62) 堀内 稔, 위의 논문, 2쪽.

63) 그 이유는 소비조합운동이 좌익운동 또는 민족운동으로서 전개되어 관헌의 탄압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1932년에는 120세대였던 것이 1940년에는 450세대로 되었다.

阪神消費組合의 조직은 한신地區의 조선노동조합의 조직을 재편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조선노동조합의 조직이 그대로 소비조합으로 이행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飯場이라는 것이 여럿 있어서 얼마간의 인간을 부리고 있었다. 부림을 당하는 쪽은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소비조합에는 보스가 가입했기 때문에 노조원은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최초의 이사장인 安泰云이라는 자도 그런 예에 속한다. 그는 芦屋에서 솜공장을 하고 있어서 조선인을 4~5명 부리고 있었지만, 그의 노동자들은 소비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⁶⁴⁾

阪神消費組合은 설립과 동시에 日消連에 가맹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일상활동은 쌀, 된장, 간장, 명태, 고추, 대두 등을 시가보다 2, 3할 싸게 파는 것이지만 「反消뉴스」(不定期, 등사판, 500부)를 발행한다든지 야간부를 설치하여 문자의 보급활동도 했다⁶⁵⁾.

阪神消費組合은 그 이외에도 조선내에서나 조합원에게 발생한 재해구원활동, 赤色메이데이투쟁, 오사카地方 소비조합간담회 및 日消連大會의 참가 등의 활동을 했다.

1935년 3월 17일의 제5회 대회 이후에는 생활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직업소개를 하고, 한 걸음 나아가 조선노동자의 사활문제인 주택부, 의료부, 탁아소, 産院, 內職알선, 문자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阪神消費組合은 간부 검거 등의 탄압, 조합에 대한 부당과세와 전쟁으로 인한 생활물자의 부족에 기인하는 경영압박 등으로 점차 어려움에 직면한다.

阪神消費組合이 언제 해소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름만은 1941년까지 남아 있지만 과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⁶⁶⁾

阪神消費組合은 좌익소비조합운동의 고양이라는 일본 전체의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조선노동의 해체후 全協으로 조직되지 않았던 많은 조선인노동자를 결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그 활동은 정치적인 면도 다소 있었지만 재일조선인의 일상생활에 입각하여 그 이익의 도모를 중점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超党派 組織을 목표로 하는 동 조합의 방침에서도 명백하다. 일상생활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족 의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일본인과 식생활의 기호가 전연 다른 조선인에게 있어서 독자의 소비조합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그것에 의하여 야학부의 설치나 주택문제에 대한 대처 등 민족적인 독자

64) 1980년 2월 2일 아마가사키市の 자택에서 西村氏 인터뷰. 堀内 稔, 위의 논문, 4쪽에서 재인용.

65) 堀内 稔, 앞의 논문, 4~5쪽.

66) 堀内 稔, 앞의 논문, 12쪽.

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在日朝鮮勞總을 全協으로 해소·통합함으로써 나타나는 민족운동의 계급 운동에의 해소와 그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의 극복책으로 나타난 그 이후의 名古屋 合同勞組와 阪神消費組合 運動을 전형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의 생활옹호운동을 살펴보았다. 재일조선노총의 全協에의 해소·통합 이후 全協이나 기타 일본인노동조합에 참가한 재일조선인 운동은 재일조선인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민족적 과제나 재일조선인 독자의 생활옹호운동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 운동은 名古屋合同組合과 같은 유일한 조선인 노동조합운동이나 각지의 소비조합운동, 기타 야학이나 주거에 관한 운동, 의료운동⁶⁷⁾ 등 생활옹호운동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在日朝鮮勞總의 全協에의 해소 후에도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은 在日朝鮮勞總 때처럼 중앙집권적·통일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지극히 분산적이면서도 서로 느슨한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조선인 독자의 생활을 지키려는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재일조선인 운동은 연속성을 갖게 된다.

V. 在日朝鮮人 勞動運動의 特性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고려하여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특성은 모두 재일조선인노동자가 식민지의 노동자라는 사실과 그들의 거주지가 자기 나라가 아니라 타국인 일본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첫째, 재일조선인 노동운동 발생의 필연성은 그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체적 조건은 재일조선인노동자수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 노동자계급의 형성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조선에서의 식민지정책과 농민층 분해라는 공급측의 압출요인, 일본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조선인 노동력에 대한 일본자본의 요구, 즉 수요측의 흡인요인, 그리고 이 양자를 연결시키는 매개항으로서 일본의 조선인 渡航정책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일조선인 노동자계급의 형성은 조선과 일본의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와 일제의 對조선식민지정책과 도합

67)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外村 大, 「大阪朝鮮無産者診療所の闘い」,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0號, 1990. 10, 1~16쪽 참조.

정책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재일조선인 노동운동 발생의 객관적 조건은 그들의 실업, 빈곤, 주거난, 열악한 노동 조건, 그리고 민족차별 등이다. 재일조선인노동자는 대부분 기능을 갖지 못한 자들로서 일본에서 토목공, 일용인부 등 자유노동자이거나 직공이라고 하더라도 잡역 등에 종사하는 미숙련공이다. 자유노동자의 경우에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게 되고, 공장직공의 경우에도 미숙련공이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우선적으로 해고된다. 일본인들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나 借家 등 생활에 관련된 부문에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을 서슴없이 행한다. 재일조선인노동자의 노동운동은 일인들의 민족적 차별로 인한 빈곤에 의해서 크게 촉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로 재일조선인의 사회운동, 따라서 그 일부인 노동운동의 기초는 조선인 飯場頭나 勞動下宿 등 親方層을 중심으로 조직된 소집단의 상호부조조직이라는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재일조선인에게는 노동재해나 질병시의 휴업에 대한 보장이 아무 것도 없었고, 고용도 불안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부조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소집단의 상호부조조직이 연대하여 1920년대 전반기에 共濟的인 노동단체가 다수 형성된다. 이러한 소집단의 상호부조조직은 그 이후에도 재일조선인 사회의 기초 조직으로서 노동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상호부조조직은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조직된 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지도자인 親方層이 이중성(한편으로는 재일조선인노동자의 착취자이면서 동시에 보호자여야 하는 위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조직된 노동단체는 융화친목계 운동단체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계 운동단체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입장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外村 大의 주장은 상당한 진실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과장하는 것은 禁物이다. 왜냐하면 在日朝鮮勞總의 조직과 지도의 상층부나 지방조직의 조직·지도의 상층부에는 지식인 엘리트들이 많았고,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外村 大의 논문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이러한 지식인 엘리트들의 역할을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셋째로 在日朝鮮勞總은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에 있어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전국적 중앙집권적인 통일체이며, 그것이 활동한 시기에 재일조선인 노동(조합)운동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일조선노동에서 나타나는 운동의 특성은 바로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의 특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재일조선노동의 노동운동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民族解放과 階級解放의 統一的 追求

재일조선노총은 그 목표에 있어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통일적으로 추구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목적은 영국의 웹(S.J. Webb) 부처에 의하면 노동생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고, 사회주의계 노동조합은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노동계급의 해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당시 재일조선인노동자계급은 조선식민지와 일본제국주의간의 민족모순과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계급모순이라는 이중의 질곡 속에 놓여 있었다. 이 이중의 질곡에서 헤어나는 길은 일제식민지로부터의 민족해방과 자본가계급으로부터의 노동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밖에 없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은 당시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동시적이고 통일적인 개념이며 목표였다. 일반적으로는 민족해방은 계급해방과 상관없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간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있던 당시에 있어서는 제국주의국가로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식민지로서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계급해방 이외에 민족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왜냐하면 유일한 사회주의국가였던 소련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는 존재했을망정 식민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의 식민지 조선의 노동계급에게 있어서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은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로였다. 재일조선노총은 창립대회시의 강령에서 노동계급의 해방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으나 민족해방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강령에서 밝힌 것은 1927년의 제3회 대회였다.

2. 政治鬭爭과 經濟鬭爭의 適切한 組合

재일조선노총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라는 과제나 일본내에서 노동자계급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치투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운동이 정치투쟁에만 편중되면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일본에 거주하는 식민지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외면해서는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일상적 경제투쟁은 그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그들을 노동조합 조직으로 유인하게 된다.

재일조선노총이 정치편향에 대한 자기비판을 하고, 일상의 경제투쟁, 따라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통일을 강조한 것은 1928년이였다.

3. 朝鮮內 運動과의 連帶 및 日本內에서의 朝·日 連帶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이 조선인의 운동이기 때문에 조선내의 운동과 연계되고 일본내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일본내의 좌파운동과 연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재일 조선노동총이 조선내의 운동과 연대를 강화시킨 것은 '조선총독폭압정치 반대운동'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조선내의 운동과의 연대는 조선내의 문제에 대한 관여 정도에 그쳐 그렇게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 좌파세력과의 연대도 조직면에서나 활동면에서 역시 그렇게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내의 조선인 단체,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계 단체와의 연대가 조직면에서나 활동면에서 한층 더 강했다.

4. 自由勞動者 中心의 地域別 組織

재일조선노동총은 기존의 각 지역의 노동조합을 통합하여 창립되었고, 창립 후에도 기존의 지역노동조합을 통합하거나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통합함으로써 조직을 확대·강화시켜 나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조선인노동자의 과반수가 자유노동자였기 때문에 재일조선노동총도 자유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在日朝鮮勞總은 자유노동자 중심의 지역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노동자와 지역별 조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재일조선인노동자들은 자유노동자 중에서도 대부분이 토목건설노동자였는데, 그들은 공사현장을 따라 항상 이동해 간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공사현장 근처의 飯場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일조선노동총은 이러한 공사현장 중심의 지역별 노동조합일 수밖에 없다.

토목공 이외의 재일조선인노동자, 이를테면 인부 등 도시의 日傭勞動者나 공장직공도 조선인이 경영하는 勞動下宿이나 아니면 도시 변두리에 형성된 조선인 부락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했다. 대도시의 변두리에는 언제나 조선인 집단부락이 존재했다.

조선인이 취업하고 있는 공장의 경우에도 그들은 대체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이들도 대체로 勞動下宿이나 조선인 부락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조선인노동자는 산업별로 존재했다기보다는 지역별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재일조선노동총은 지역별 조직이었다.

재일조선노동총이 '자유노동자 중심의 지역별 노조'라는 점에서는 서구제국의 '일반노동조합'(general union)과 일면에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제국의 일반조

합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별 조합에서 배제된 교통, 운수, 건설, 유통 등의 비숙련노동자·보조노동자·잡노동자로 조직된 조합인 데 반하여, 재일조선노총은 이들 노동자 이외에 제조업(공장)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재일조선인노동자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노동조합과 다르다.

재일조선노총은 그 제3회 대회에서 각 지역에 존재하는 복수의 조합을 통합하여 一府縣 一組合의 원칙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노동조합이 공장노동자 중심의 직업별 또는 산업별 조직인 데 비하여 在日朝鮮勞總은 자유노동자 중심의 지역별 조직이라는 점에서 조직상의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넷째로 재일조선노총이 全協으로 해소·통합된 후에는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은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협이나 기타 일본인 노동조합으로 들어간 노동자는 소수이고, 많은 노동자들은 조선인 독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소비조합운동 등을 계속하고 있었다. 재일조선노총 해체 이후 유일한 재일조선인 노동조합운동은 名古屋合同勞組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名古屋合同勞組는 지방 단독조합으로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적절히 배합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한 지역에 국한되는 운동이기는 하지만, 재일조선노총의 운동을 계승했다고도 할 수 있다.

名古屋合同勞組의 노동운동을 제외하면, 각 지역에서 활발한 소비조합운동이 전개되고, 그 이외에도 야학운동,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 無診(無産者診療所)運動 등 재일조선인의 생활옹호운동이 전지역에 걸쳐 전개된다. 이러한 생활옹호운동은 그 성격상 주로 일상 경제투쟁에 중점이 두어지고, 정치투쟁은 거의 행하여지지 않는다. 당시 재일조선인들의 처참한 생활조건을 생각하면 이러한 생활옹호운동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또한 생활옹호운동은 관헌의 탄압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이유로 1930년대의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은 지역별로 분산적으로 생활옹호운동이 전개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유일하게 名古屋合同勞組에 의해서만 전개되었고, 名古屋合同勞組를 제외하면 정치운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930년대에는 재일조선인에 의한 노동운동은 전국적·통일적인 조합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산된 생활옹호운동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노동운동은 계속되지만 그 형태는 완전히 다르다.

名古屋合同勞組運動이나 각 지역의 생활옹호운동 등 재일조선인에 의한 자주적인 운동도 일제의 파쇼화가 강화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심한 관헌의 탄압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協和會에 의한 皇民化運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1930년대 후반에는 거의 소멸된다.

VII.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하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이 일반적인 노동운동과는 다른 특성에 관해서 논술하였다.

상술한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재일조선인이 식민지 민족의 노동운동이라는 사실과 자국이 아닌 일본에서의 운동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평가해 보기로 하자.

在日朝鮮勞總의 全協에의 해소·통합은 물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지만, 재일조선인은 계급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인과는 다른 민족문제, 노동문제, 생활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었고, 또한 全協의 산업별 조직의 원칙도 재일조선인노동자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도식화였다고 생각된다. 在日朝鮮勞總의 노동운동이 좀더 지속되었다면 비록 관헌의 탄압을 계속 받기는 했을지라도 적어도 1930년대 전반까지는 재일조선인의 노동 및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층 더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는 재일조선인노동운동에 관한 通史나 地域史, 事件史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그 특성을 체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관한 연구는 극히 단편적인 언급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노동운동사에서 제시되는 노동경제학이론과 노동운동론을 원용하면서 서구제국의 노동운동과의 관련에서 그 특성을 부각시켜 체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도출하고 있는 제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여타 식민지나 이민노동자의 노동운동과의 비교는 지면관계상 다음 과제로 남겨 둔다.

參 考 文 獻

● 資 料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第一~五卷), 三一書房, 1975~76.

—————, 『朝鮮問題資料叢書』, (第一~十五卷).

村田陽一 編譯, 『コミンテルン資料集』, (第一~五卷), 大月書店, 1978~83.

● 著 書

加藤佑治, 『日本帝國主義下の勞動政策』, 御茶の水書房, 1970.

姜東鎮,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9.

金森襄 作, 『1920年代の社會主義運動史』, 未來社, 1985.

金仁德, 『식민지시대 제일조선인연구』, 국학자료원, 1996.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의記錄』, 未來社, 1965.

楫西光速 外 3人, 『日本資本主義の發展』, 東京大學出版會, 1959.

—————, 『日本資本主義の沒落』, I - IV, 東京大學出版會, 1960~64.

全基浩, 『新勞動經濟學』, 무역경영사, 1995.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御茶の水書房, 196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Cole, G.D.H., *A Short History of British Working Class Movement*,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Limited, The Labou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25.

Webb, S. & B., *The History of Trade Unionism*, Augustums M. Kelley · Publishers Clifton, 1973.

● 雜 紙 (研究論文集)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在日朝鮮人史研究』, 創刊號~第26號, 1977~96.

● 논 문 (본 논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배열하고 같은 필자의 경우에는 통합하되 역시 본 논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배열함. 그리고 본 논문에 인용되지 않은 참고 논문은 말미에 출판시기 순으로 배열함)

全基浩, 「日帝下 韓國人勞動者의 日本強制連行과 勞務管理」, 『勞使關係의 課題와 人的 資源開發戰略』(1), 淵堂 李奎昌教授 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4.

—————, 「日帝下 在日韓國人勞動者階級の 形成」, 『勞動經濟論集』, 第17卷 第2號, 韓國勞動經濟學會, 1995.

—————, 「日帝下 在日韓國人勞動者의 賃金管理」, 『古稀紀念論文集』, 淸堂 金玉根博士 古稀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95.

- _____, 「日帝下 在日朝鮮人の借家難에 대한 研究」, 『經濟學研究』, 第12號, 慶熙大學校 經濟研究所, 1996.
- 金廣烈, 「1920~30年代 在日朝鮮人と失業救濟事業」,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4號,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1994.
- _____, 「1930年代 名古屋地域における朝鮮人労働運動」,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3號, 1993.
- 後藤 耕二, 「京都における在日朝鮮人をめぐる状況」,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1號, 1991.
- 市原 博, 「戦時下 朝鮮人炭鑛労働의 實態」, 日帝36年史研究會・曹溪宗 在日總本山 高麗寺 主催, 朝鮮人 強制連行에 관한 國際심포지엄, 1992.
- 外村 人, 「親睦扶助團體と在日朝鮮人運動」,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3號, 1993.
- _____, 「在日朝鮮労働總同盟に關する-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第18號, 1988.
- _____, 「大阪朝鮮無産者診療所の闘い」,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0號, 1990.
-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在日朝鮮人史研究』, 創刊號, 자료편 1977.
- ドナルド・スミス, 「1932年 麻生炭坑爭議における労働者同士の團結と對立」,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5號, 1995.
- 野村 名美, 「朝鮮労働總同盟會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 第5號, 1979.
- 金仁德, 外村大 譯, 「在日朝鮮労働總同盟についての-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6號, 1996.
- 堀内 稔, 「兵庫縣における朝鮮人労働運動」, 『在日朝鮮人史研究』, 第19號, 1989.
- _____, 「阪神消費組合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 第7號, 1980.
- 高木 伸夫, 「滿州事變前後の労働運動と在日朝鮮人労働者」,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3號, 1993.
- 松永 洋一, 「關東自由労働組合と在日朝鮮人労働者」,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號, 1978.
- 谷合 佳代子, 「1930年代 在阪朝鮮人労働者のたたかい」, 『在日朝鮮人史研究』, 第15號, 1985.
- 樋口 雄一, 「平作川改修工事爭議」, 『在日朝鮮人史研究』, 第5號, 1979.
- 角木 征一, 「東京深川における朝鮮人運動」, 『在日朝鮮人史研究』, 第6號, 1980.
- _____, 「全協失業者同盟下の朝鮮人運動」, 『在日朝鮮人史研究』, 第9號, 1981.
- 若生 みすず, 「朝鮮人労働者の兵神爭議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 第10號, 1982.
- 堀内 稔, 「在日朝鮮人アナキズム労働運動(解放前)」, 『在日朝鮮人史研究』, 第16號, 1986.
- 橋澤 裕子, 「新潟縣における朝鮮人労働運動」, 『在日朝鮮人史研究』, 第17號, 1987.

金 浩, 「山梨縣梁川村の朝日労働者衝突事件」,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0號, 1990.

金森 襄作, 「在日朝鮮勞組大阪事件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0號, 1990.

堀内 稔, 「兵庫縣朝鮮人の初期労働運動」,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3號, 1993.